

노조가 뭐길래...광주·전남 곳곳 양대 노조 '세력 싸움'

고용 요구하며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한달 넘게 맞불집회 계속
한국노총 과반수 노조된 사업장선 민노총이 지노위 이의신청
기업들은 눈치보기...“코로나19 위기 상황 자체해야” 지적도

광주·전남 곳곳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충돌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가 하면, 과반 노조로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기업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추락하면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 자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염주포스코 주택재개발 현장을 비롯, 광주·전남 건설현장 곳곳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염주포스코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의 경우 한 달 넘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맞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입구에 천막과 차량을 세워놓고 한 달

넘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투입할 경우 자신들 소속 노동자를 고용해달라는 게 양측 노조 요구사항이다. 현재로는 타워크레인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크레인인 본격적으로 사용될 경우 양측 노조 간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양측 노조 갈등과 충돌로 공기가 연장되면 손실 비용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북구 제일풍경채 공사현장도 비슷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달 넘도록 공사 현장 입구에서 자신들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고용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벌

이고 있다. 전남지역도 비슷해 무안 공무원통합관사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고용 촉구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 등이 급랭,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양대노조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한 사업주의 혼란과 공기 지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는 고용뿐 아니라 회사 내 과반수 노조 선정에서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주)호원의 과반수 노조로 선정, 사측을 상대로 하는 교섭권을 확보한 데 따른 이의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방노동위원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부는 "과반수 노동조합 선정 결과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호원지부의 설립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회사측 개입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호원지부측은 "교섭권을 빼앗긴 민주노총의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회사측도 "사측이 노조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호원은 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광주지

역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전체 직원만 400명이 넘는다. 교섭권을 갖게 되면 노동3권 행사 및 경영권에 참여가 가능해지는 만큼 조합원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북수노조제도에 따른 노노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자칫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경영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광주지역 공인노무사 A씨는 "현재 북수 노조 제도는 하나의 노동조합에만 교섭권을 주고 대표노조로 인정하는 형태라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간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윤장현 전 시장이 준 거액
공천 기대하고 건넨 것”
대법, 징역 1년 징역 2년 확정



1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버스들이 가득 주차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넨 것은 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건넨 것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징집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지난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축제 취소에 개학 연기...전세버스업계도 '아우성'

예약 끊기고 통학버스 운영 못해
광주·전남 84대 휴업 신고

코로나19 확산세로 광주·전남지역 전세버스 업계도 아우성이다.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단체 관광객 모집이 아예 불가능해지는데, 초·중·고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통학버스 역할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다. 17일 광주·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변호판을 반납하고 휴업을 신고한 광주·전남지역 전세버스만 84대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휴업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17개 업체가 3000여대의 전세버스를 운영중이지만

단체 예약이 뜰 끊기면서 고정비용으로 지출할 400만원 가량의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 당장, 전세버스 운행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광주·전남 전세버스 운행횟수는 12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20건)의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 매년 치르던 축제를 취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매년 이맘때면 마화·산수유·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지역 축제 등을 둘러 보려는 단체 관광객들의 버스 예약 문의가 쇠들했지만 올해는 아예 예약이 뜰 끊겼다. 버스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A전세버스 업체 관계자는 "전남지역 축제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난해보다 매

출이 80% 가량 감소했다"며 "기사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초·중·고 개학 연기도 버스업계 수입 감소에 한몫을 했다. 전세버스 기사들의 절반 가량이 통학·통근 버스를 운행하며 일정 수입을 올렸지만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으로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4월, 5월 봄 축제가 이어지고 초·중·고의 수학여행·체험학습 등이 몰리는 성수라는 점에서 자칫 장기간 화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의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탓에 정부지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 대책 마련을 하소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관예우 근절될까

법무부, 퇴임후 사건 수임 제한기간 1년→최대 3년

'몰래 변론' 처벌도 강화

퇴직한 법관과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몰래 변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 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근절 방안으로는 우선,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퇴임 뒤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현행법(변호사법 31조3항)은 법관·검사·장기복부 군법무관 등 공직퇴임번호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에서 퇴임 때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1~3년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차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급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검 차장검사, 고검 부장검사, 지법 수석부장판사, 2급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 기준으로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자는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은 조세포탈이나 수임 제한 등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이 없다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조 브로커 퇴출을 위해 재판·수사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운전 단속현장 맞닥뜨리자 차 놔두고 '줄행랑'



음주 운전을 하던 50대가 단속 현장과 맞닥뜨리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서행.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53)씨는 전날 밤 11시 40분경 광주시 북구 오지동 한국전력공사에서 용봉 IC 방면으로 가는 일반로에서 리바콘을 'S'자로 세워 지나가도록 하는 선별 음주 단속

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리바콘 20m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A씨는 음주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95%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두암동에서 친구들과 소주 5-6잔을 마신 A씨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겁이나 도망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